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6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7일 2025년 4월 4일 금요일

"법은 밥이다… 국민의 삶 지키는 판결을"

헌재, 오늘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 전 세계 이목 집중

재판관 6인 이상 인용의견 땐 파면, 3인 이상 기각·각하 땐 복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날이 밝았다.

〈관련기사 2·3·6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일상을 빼앗겼던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판결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늠자가 될 심판이다.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염원한 국민의 화답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이 선고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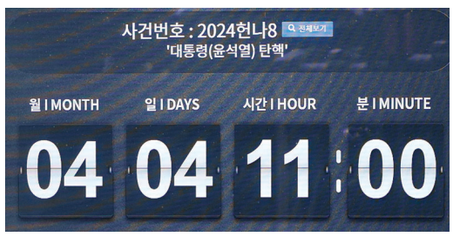
헌재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이번 심판은 대통령 한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법 지식과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시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여당의 '줄탄핵'에 따른 '경고성' 조치였고 계엄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요원'을 끌어내라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었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고 항변했다.

12·3 계엄은 국민 갈등과 혼란을 불렀다.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비상 계엄선포 이후 122일 동안 대한민국은 둘로 분열됐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 대신 바뀐 '응원봉'과 여전한 '태극기'가 대립하며 민심은 둘로 나뉘어 갈등을 벌여왔고, 국정은 마비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원하는 각자의 세력 중 한쪽은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길목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지만, 윤 대통령, 정치인, 국민 모두 헌재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먼저 당사자인 윤 대통령 스스로 헌재의 결과에 승복을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세력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재의 심판을 수용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헌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국론분열을 잠재우고 국민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탄핵 선고일…경찰, 전국에 '갑호비상'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했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일 오전 11시께 헌재에 '8 대 0'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탄원서와 100만명의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8개 야당과 함께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북스 - '인간은 왜…' '자연으로 향하는 삶' ▶14·15면

KIA 타이거즈의 봄날은 언제 오나 ▶18면

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폭탄…광주 기업 타격 불가피

한미 FTA 사실상 백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α'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9면〉

상호 관세와 함께 3일부터 자동차 등에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기아차 등 광주 주력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중국(34%), 일본(24%), 유럽연합(20%), 베트남(46%) 등도 초고관세를 내게 됐다.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 등에도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난관에 빠지게 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25%), 자동차(25%)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상호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無)관세가 유지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